

# 우리는 「모범건축사」가 아니다

—당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부쳐—

함인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일하며 생각해야 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 괜한 생각만 든다.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의사·변호사에 비해 건축사는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그들은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 하는 얼굴, 문제가 있어 찌그러진 얼굴을 상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성공하여 새 건물 지을 꿈에 부푼 기쁜 얼굴과 일하지 않는가?” 그러나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환자와 의뢰인은 소위 아쉬운 사람이고 따라서 의사·변호사에게 매달리는 입장이 되는 반면, 건축사에게 온 사람은 아쉬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이고 오히려 건축사가 매달리게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역설이 오늘날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현금의 건축허가제한 조치라는 것 때문에 막상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땅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설계사무소들이다. 누가 재채기 하면 누구는 고삿을 앓는다고, 건설경기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이 조치에 의해 애꿎게 설계사무소만 골탕을 먹는 것은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먹이사슬중에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평당 천만원의 땅과 평당 이백만원의 건물과 평당 삼사만원의 설계 사이의 힘의 논리랄까, 기실 허가제한 조치의 당초 명분은 과소비억제차원의 위락시설 중심의 제한이었다. 그러나 근 일년이 지난 지금 그 명분은 오간데 없고, 모든 민간 건축에 대해 전면 허가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과열 건설경기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건설경기가 왜 과열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없고, 안일한 행정편의주의만 있다.

과열 건설경기의 원인제공자는 일관성과 장기전망이 없기로 유명한 한국정부고 그 원인은 개발공약의 남발, 주택 200만호 건설의 무리한 추진, 알맹이 없는 토지공개념도입등이다.

먼저, 6공화국에서의 두차례 선거를 통해 “아무 계획성없이 쏟아낸 무책임한 공약을 추스리느라 전체 개발의 균형성과 적절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두번째로, 한해 40만호 건설능력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70만호씩 지어 200만호를 산술적으로 채움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무모한 정책때문이다. 분배구조의 왜곡을 외면한채 공급만 늘이면 된다는 발상은 최근의 집값 폭등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세번째로, 수사학적으로만 의미있는 토지공개념도입이다. 금융실명제 등의 실질적 조치없이 토초세등의 미봉책으로 공개념을 실현하려니, 염려한 자본들은 빠져나갈 곳을 다 마련하고, 오히려 현재의 이상건설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필요이상의 논의를 더하는 것은 건설경기 과열의 근원적 원인이 우리사회의 왜곡된 경제구조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제한 조치같은 단발적이고 대중적 처방으로는 문제해결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도시 개발, 서해안 개발등의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적 건설사업에 비교해 볼 때 민간건축 제한의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정부 자체조사도로 밝혀진 바가

이렇게 자신들의 목을 죄는 조치가 일년이상을 지속되고 있는데 건축가들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분명히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인 이 조치에 의해, 실제로 당하고 있는 주체이면서,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관련집단에서 일인반구의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슬프기까지도 했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부문을 계속 죄겠다는 것은 여기가 가장 손쉽고 만만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설계사무소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설계는 허가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용역을 인정 못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목을 죄는 조치가 일년이상을 지속되고 있는데 건축가들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분명히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인 이 조치에 의해, 실제로 당하고 있는 주체이면서,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관련집단에서 일인반구의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슬프기까지도 하다.

한술 더 떠서 건축사협회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5월 18일 「건축질서 건설화 결의대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건축 부조리를 배격하고, 환경개선운동을 할 것등을 결의하였다.

건축주나 건축공무원은 부조리 배격 결의대회를 하지 않는데 왜 건축사들은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상응하는 인식 및 태도변화가 아우르지 않는 우리만의 결의대회가 무슨 소용인가.

그런 관제대모를 통해 「모범」이 되기를 결의하는 직종에

드디어 건축사까지 거들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모범 건축사」가 되어야 할만큼 부조리의 주범이고, 허가제한조치로 인해 일차적 피해를 입어야 할만큼, 과열건설경기의 주범이었던가?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사회내에서의 건축전문가들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 국가의 건축허가권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의의를 유지했던 면허건축사 제도에만 순치되어 있는 우리들은 하라는데로 결의대회나 하고, 목을 죄는 조치에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숨을 죽인다.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의 권위는 폐쇄성(Closure)의 강약에 따른다. 다만 그 폐쇄가 비민주적인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민주적인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못받아가 결정되는 것일 따름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건축사들이 의사·변호사에 비교하여 존경과 대접을 못받는 것은 그동안의 편력을 보아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하겠다」고 결의 하였다.

그런데 이 신뢰는 관제대모에서의 결의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에 의한 경쟁사회에의 기여 등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모범」이라는 접두사를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